

이슈브리프

No. 2026-18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안보 전략: 확장억제와 확전통제의 딜레마 극복

김성한 객원선임연구위원

2026-06-15

한동안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Taiwan Strait)과 한반도 위기를 별개의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 왔다. 미국의 군사계획과 전략 논의는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분리된 작전 공간, 즉 서로 다른 전구(戰區, Theater of war)로 간주하고 각각 별도의 억제 및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워싱턴의 싱크탱크와 안보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국이 다양한 형태의 복합 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만해협 위기가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복합위기론'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로 확산될지 여부가 아니라,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거의 동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이 요구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확전통제(escalation control)'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이다. 최근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들을 대(對)이란 공격에 동참시키기보다는 확전통제에 더 중심을 두는 정책을 폈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일정 시점에 확전통제를 시도했다. 이는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확

장억제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의 단호한 대응보다 확장통제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보장받으면서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확대돼 '양면위기(Two-Front Crisis)'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제 하에, 한-미-일 차원의 대비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만해협-한반도의 '사실상 단일 전구(*de facto* one theater)' 개념을 도입해, 각각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군 사령부를 제도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된 영역으로 인식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차원에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억제를 중심 임무로 수행하고, 일본은 후방지원 거점 역할과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보호 임무를 담당하며, 미국은 동맹국 간 군사적 노력을 통합·조정하는 중심축으로서 통합 전장관리(Integrated Theater Management)를 행하는 3국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만해협 및 한반도 유사시 국제적 역량을 결집할 유엔사의 전략 플랫폼 역할 정립 역시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활용해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 또는 연쇄적 위기를 조성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미-일 협력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외교적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운영적 안보협력(*operational security cooperation*)' 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대만해협과 한반도

미국 행정부는 오랫동안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를 별개의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 왔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봉쇄가 곧바로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계획과 전략논의는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서로 다른 작전 공간, 즉 상이한 전구로 간주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억제 및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전구란 중요한 군사적 사태가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지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전구는 전쟁 작전에 현재 관여하고 있거나 향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역·육상·해상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군사적 목표와 지휘체계를 가진 특정한 전략 공간을 지칭한다. 클라우제비츠(Clauswitz)는 『전쟁론』에서 전구(Kriegstheater)를 “전쟁이 전개되는 공간의 한 부분 (a portion of the space over which war prevails)”이라고 정의했다.¹ 이러한 구분은 중국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로 간주하고, 북한 문제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과제로 구분해 온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 사고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과 2018년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와 NDS, 그리고 최근의 전략 문서에서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상기 문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안보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적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을 전략적 핵심 전제로 삼지는 않았다.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연동해 행동하거나 중국과 북한이 공동의 작전 목표 아래 움직일 가능성에 관해서도 공식 문서상 명시적인 언급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중국-러시아-북한 간 협력의 심화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일한 군사위협으로 규정하는 데 신중한 미국 행정부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2000년대 중반 한미 간 주요 현안이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만 고정하지 않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에는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역외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구상이 존재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를 기본적으로 별개의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대규모 군사행동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거나, 설령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만약 미국이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면, 주한미군의 역외 전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훨씬 더 큰 전략적 제약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통적 접근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국이 다양한 형태의 복합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² 이는 중국이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나 군사 인프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와 동시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이 대만과 한반도라는 두 개의 전구에서 동시에 대응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단순히 중국과 북한의 동시 행동 가능성을 넘어 중국-러시아-북한 간 전략적 연계가 미국의 전력 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 위기관리 정책에서 나타난 미 행정부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분단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청와대 기습 사건(김신조 사건, 1968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1976년), 천안함 폭침(2010년), 연평도 포격(2010년) 등 주요 위기 국면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보복을 독려하기보다는 위기가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지 않은 비중을 두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엔사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를 위해 '확전통제' 기능을 수행해 온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직후 미국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자제시키는 데 상당한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가 연계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중국-북한-러시아의 공모 또는 각자의 전략적 계산에 입각해 대만해협 위기와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특히

보수 정부일 경우) 동맹 차원에서 도발 상대에 대한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한반도 위기관리 행태에 비추어볼 때, 전면전 방지 차원에서 한국에 확전통제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기대하는 '확장억제'와 미국이 중시하는 '확전통제'가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동맹의 관점에서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한국과, 중국과의 전쟁 또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의 비화를 막기 위해 갈등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미국 사이에 전략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복합위기론'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로 확산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확전통제와 한국이 요구하는 동맹 차원의 확장억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다. 과거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논쟁이 '대만과 한반도의 분리 가능성'을 전제로 했다면, 오늘날의 논의는 '대만과 한반도의 연계 가능성' 속에서 동맹의 위협 억제 기능과 (억제 실패 시) 위기관리 정책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복합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확장억제 對(대) 확전통제

1) 개념상의 차이점

억제(deterrence)는 적이 공격을 통해 얻을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예상하도록 만들어 공격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다. 억제는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그 능력을 사용할 정치적 의지(will), 그리고 상대가 이를 실제로 믿는 신뢰성(credibility)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냉전기 미국은 이러한 억제 논리를 동맹국 방어에까지 확대하는 확장억제 전략으로 발전시켰다. 확장억제는 단순히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정치적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동맹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확장억제는 구조적으로 신뢰성 문제를 내포한다. 미국이 자국 본토 방

어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서울·도쿄·아부다비·리야드·도하를 위해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확장억제는 일반적으로 '거부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응징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라는 두 방식으로 작동한다. 거부억제는 미사일 방어 체계, 방공망, 전진배치 전력을 통해 공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응징억제는 공격 시 압도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공격을 억제한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응징억제가 전쟁 확대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동맹국은 강력한 보복을 통해 억제 신뢰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려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확장억제와 확전통제 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 확전통제는 억제 실패 이후의 전략으로, 이미 발생한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수직적 확전통제'(재래식 충돌의 핵 전쟁화 방지), '수평적 확전통제'(특정 전장의 타 전장 확산 방지), '행위자 확전통제'(제3국 개입 제한)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확장억제는 공격 자체를 방지하는 전략이고, 확전통제는 공격 이후 전쟁 확대를 관리하는 전략이다. 양자는 평시에는 상호보완적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충돌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핵·미사일·드론·사이버 능력을 결합한 제한전과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미국 본토보다 동맹국과 역내 기지를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를 시험한다. 따라서 확장억제의 핵심 질문은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미국이 확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인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핵보유국 간의 '상호 확증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미국의 개입 비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초국가적 현실을 반영한다. 과거 냉전기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자산 배치와 기술적 우위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적대 세력은 미국의 전면적

보복을 회피하는 '비대칭적 틈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중국의 급격한 핵전력 증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 미국 본토 및 해외 군사 기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가"라는 이른바 '단절(decoupling)'의 공포를 동맹국들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쟁이나 회색지대 도발과 같이 전면전이 아닌 모호한 분쟁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 보복 카드를 사용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확장억제의 성패는 결국 미국의 군사적 물리력이 아닌 정치적·전략적 의지와 신뢰성에 의해 좌우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자국 본토 피격 위험이라는 극단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동맹국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미국 우선주의' 시대에 미국 주도 동맹 체제를 위협하는 주요 변수가 됐다.

2) 미-이란 전쟁에서 나타난 확장억제 대 확전통제의 딜레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군사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미-이란 전쟁'은 미국의 동맹 전략 전반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란이 역내 미군기지, 이스라엘, 미국에 협력하는 아랍 국가, 해상교통로를 보복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직접적 교전 당사국이 아닌 GCC 회원국들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점이다. GCC 회원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은 미군 전력 투사의 핵심 거점으로서³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의 혜택을 보기보다, 자국 영토와 전략 인프라가 미-이란 전쟁의 파급 공간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전쟁 초기에 GCC 회원국들은 행여 이란에 보복 공격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영토나 영공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⁴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군사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을 사실상의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GCC 회원국들과 이라크, 요르단에까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자 UAE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태세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실제 보복 공격까지 검토하거

나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GCC 회원국들의 적극적 군사 개입이나 대이란 합동 공격을 요구하기보다 확전통제에 무게를 두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과 군사력을 약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전쟁이 이스라엘·미국 대 이란의 충돌을 넘어 걸프 지역 전체를 휩쓰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다. UAE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자적인 보복 공격에 나선 경우, 미국은 이란이 GCC 회원국 전체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석유 시설, 항만, 공항, 담수화 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명분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동 내 군사적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GCC 회원국들에 방어 역량 강화, 특히 미사일 요격에는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군사 보복이나 본격적인 참전은 자제하도록 하는 확전통제 정책을 유지했다. UAE의 '비밀 보복 공격설'이 제기되기는 했지만,⁶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아직 없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GCC 회원국들을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후방지원과 방어 협력 파트너로 남겨두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과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을 수행한 전쟁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확대보다 지역 안정과 충돌 관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셈이다. 이는 미국 동맹전략이 전통적 의미의 확장억제에 실패할 경우, 지역 전쟁으로의 확대 방지를 위해 확전통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GCC 회원국들을 자제시킨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GCC 회원국들의 제한된 고강도 군사작전 경험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예멘 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규모 통합 항공 작전, 장거리 정밀 타격, 합동 전장 관리와 같은 국가 간 전쟁 수행 경험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란과 같은 미사일·드론 강국과의 직접 충돌 경험은 사실상 부재하다. 따라서 GCC 회원국들의 추가 개입은 미국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GCC 회원국들의 방어와 위기관리를 미국이 추가로 떠안게 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둘째, GCC 회원국들의 지리적 취약성이다. 이들 국가는 이란과 인접해 있으며 에너지 시설, 항만, 공항, 해상교통로 등

전략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다. 적극 개입 시 이란은 미군 기지와 더불어 GCC 회원국들의 민간 인프라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셋째, GCC 회원국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같은 집단 방위 체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공동 작전 경험도 제한적이다. 게다가 이란과 경제·외교 관계를 병행 유지하고 있어 전면적 적대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 파트너인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확전통제를 가했다. 미국은 작전 초기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공동 군사행동을 펼치는 실질적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전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통제되지 않자 양국 사이에는 심각한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속한 종전을 원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명분이 마련되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에 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전통제'를 시도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Netanyahu)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군사적 우위를 극한으로 확대하고 이란의 억제력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미국이 외교적 타협을 염두에 둔 '확전통제' 논리를 지향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와 그 대리 세력들을 철저히 무력화해야만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응징 억제' 논리를 고수한 셈이다.

이렇듯 미-이란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은 동북아에도 직간접적 함의를 지닌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해상 봉쇄 등을 단행해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저지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나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신해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는 대만해협과 분리된 공간으로 남기 어렵다. 더욱이 대만해협 위기는 단순한 군사적 분쟁이 아니다. 중동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원유 및 LNG 수송선은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통과한 뒤 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를 거쳐 대만 동측 해역과 바시해협(Bashi Channel), 루손해협(Luzon Strait)을 지나 동북아로 진입한다. 이 점에서 대만해협과 인접 해역은 '동북아의 호르무즈'라고 할 수 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안보 전략

1) 대만해협-한반도 양면위기(Two-Front Crisis) 대비

미-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란이 GCC 회원국들을 공격한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나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 시설을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실패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한국과 함께 중국 또는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까? 아니면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GCC 회원국들에 한 것처럼 한국을 압박해 대만해협과 한반도에 동시적 위기를 피하려 할 건가.

한-미가 중국에 대한 보복을 자제할 경우, 북한은 자신감을 얻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도발에 한미가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확전통제도 쉽지 않다. 즉, 미국이 대만해협 사태가 한반도 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통제해 대만해협 사태에 집중하려고 할 경우, 그 작전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더 나아가 한-미-일은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확대돼 '양면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가능성이 더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대만해협-한반도 '사실상 단일 전구(De Facto One Theater)' 상정

대만 유사시 한국 안보를 논의할 때 기존 접근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독립된 전구, 즉 별도의 군사작전 구역으로 간주해 왔다. 한반도 전구는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담당하고, 대만해협 전구는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와 주일미군(USFJ)이 담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형 구조는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하나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중국의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돌파 전략 속에서 핵심 거점이다. 한반도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의 감시망이 집중된 지역이다. 대만해협 역시 중국 해군의 원양 진출과 해상교통로 통제에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에너지 수송 상당 부분이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또한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 위기는 곧 경제안보 위기로 연결된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반도와 대만해협 양쪽에서 미 동맹국들의 대응을 분산시키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 전구를 완전히 통합한 '단일 전구(one theater)' 구축은 한-미-일 관계가 3국 군사동맹이 아니므로 어렵다. 한국은 대만 문제 직접 개입에 관해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연합사와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서로 다른 지휘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은 '사실상 단일 전구'다. 즉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부를 마치 3자 동맹인 것처럼 제도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된 위기 공간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차원에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⁷ 핵심은 3국 동맹에서나 가능한 '공동 작전(joint operation)'보다 한 단계 아래인 '운영적 안보협력(operational security cooperation)'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지휘체계를 통합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자는 게 아니라, 한-미-일이 대만해협과 한반도 두 전구를 전략적으로 연계된 사실상의 단일 전구로 보고 대만해협-한반도 양면위기를 상정한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3) 한-미-일 역할 분담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정보공유, 제한적 연합훈련, 정책협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NATO와 같은 통합지휘체계나 사전에 조율된 역할 분담 체계는 한-미-일 간에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구에,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일본 방어 및 인도태평양 지역 후방

지원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양면위기 발생 시 미국의 전략자산 배분을 둘러싼 조정 문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우선순위 갈등, 한일 간 미묘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양면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 연계 가능성을 반영한 연합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면위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지휘소훈련(Command Post Exercise, CPX)과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 TTX)을 정례화하고, 프리덤 엣지(Freedom Edge)와 같은 다영역 연합훈련을 확대해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해양·공중 영역 협력을 넘어 핵억제, 사이버 안보, 우주작전 등 신형 안보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실시간 연계, 확장억제 체계의 제도화, 미사일방어 네트워크 통합,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양면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역할 분담 또한 중요하다. 한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억제를 중심 임무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기지 방호와 미사일·드론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천공항·부산항·평택항 등 주요 전략거점과 에너지·통신 인프라에 대한 방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억제와 전시 증원전력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보호에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구 전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후방지원 거점 역할과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서남도서 지역을 활용해 바시해협과 루손해협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연합군의 병력·물자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대잠수함전, 정보수집 및 ISR 임무를 통해 역내 연합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 간 군사적 노력을 통합·조정하는 중심축으로서 '통합 전구관리(integrated theater management)'를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항모전단, 전략폭격기, 잠수함 전력, ISR 자산, 우주·사이버 역량 등 전략자산을 활용해 대만해협과 한반도라는 두 전구를 연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확장억제 제공과 확전통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과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단순한 정보공유와 훈련을 넘어, 양면위기에 대비한 역할 분담과 작전 조정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엔군사령부의 전략적 플랫폼 기능 정립

미국-이란 전쟁 초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GCC 회원국들보다 NATO 회원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기여'를 압박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 동맹전략이 '지역 억제(local deterrence)'와 더불어 '글로벌 통합억제(global integrated deterrence)'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상황에서 GCC 회원국들이 아닌 한국, 일본, NATO 등 역외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군사적 실리와 국제정치적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전쟁에 '연루(entrapment)'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시간을 끌며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을 명확히 천명하고 우방국들에게 사전에 협조를 요청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 양면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미-일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양면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방국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확보해 놓으면 억제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엔사다. 현재 유엔사는 6·25 전쟁 당시 전투 부대 파병국 16개국 중 14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콜롬비아)과 의무 병력 지원 6개국 중 4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총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유사시 전력

제공자(force provider)라는 두 가지 임무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2조 17항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충돌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남북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곤 한다. 정전체제 유지라는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임무 때문이다.

반면 유사시 전력 제공이라는 유엔사의 임무는 한미동맹을 보완하고 지탱한다. 정전협정 체결 당일인 1953년 7월 27일 유엔 참전국 대표들은 워싱턴에 모여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즉각 개입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게다가 유엔사는 주일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7개 기지를 활용해 미군과 다국적군의 병력, 장비, 물자 등을 한미연합사에 제공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유엔사 회원국들과 다국적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유엔사의 전략적 플랫폼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1953년 워싱턴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사 회원국 중에서 한반도 안보에 기여도가 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이들과 방문국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공동 훈련 등 군사적 목적으로 국내에서 잠시 활동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VFA 체결을 협의한다는 자체가 이들과의 안보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맺음말

미국-이란 전쟁은 확장억제와 확전통제 간의 딜레마가 실제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GCC 회원국들을 공격했다. 미국은 직접적인 교전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GCC 회원국들의 적극적 군사 대응을 요구하기보다 확전 방지와 위기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이스라엘에 관

해서도 일정 수준의 군사행동 자제를 유도하며 전쟁의 지역적 확산을 억제하려 했다.

이는 동북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해상 봉쇄 등을 단행해 발생하는 대만해협 위기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저지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나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중국을 대신해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는 대만해협과 분리된 공간으로 남기 어렵다. 대만해협은 단순한 군사적 분쟁 가능 지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및 무역 공급망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교통로라는 점에서 '동북아의 호르무즈'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만해협 위기는 군사안보 위기인 동시에 경제안보 위기이며, 그 영향은 대만해협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서로 분리된 전구로 인식하는 기존 접근은 한계가 있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이 대만해협-한반도 양면위기 발생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안보 전략은 양 지역을 상호 연계된 전략 공간으로 이해하는 '사실상의 단일 전구' 관점을 미국 및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일이 3국 동맹이 아닌 이상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군사 지휘 체계를 통합할 수는 없으므로,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차원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라는 상호 연동된 전구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제한된 군사·경제·외교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3국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한-미-일 협력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외교적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운영적 안보협력(operational security cooperation)'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통합 운용, 확장억제와 미사일 방어 협력, 사이버·우주 영역의 공동 대응, 그리고 양면위기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합훈련과 역할 분담 체계의 제도화가 그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실상의 단일 전구 전략(*de facto one theater strategy*)'이야말로 동북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위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
- ¹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Book V, Chapter 2.
- ² Victor Cha and Sungmin Cho, *South Korea's Role in a Taiwan Contingency* (Washington, D.C.: CSIS, 2023), <https://www.csis.org/podcasts/impossible-state/south-koreas-role-taiwan-contingency>; Pacific Forum, *South Korea's Role in a Taiwan Contingency: Indirect but Essential*, PacNet No. 68 (2023), <https://pacforum.org/publications/pacnet-68-south-koreas-role-in-a-taiwan-contingency-indirect-but-essential/>; Stacie L. Pettyjohn et al., *The U.S. Military and the Defense of Taiwan*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23),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658-1.html; Jacob Stokes and Becca Wasser, *The Taiwan Crossroads: Exploring Alternative Fut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U.S. Strategy* (Washington, D.C.: CNAS, 2023),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the-taiwan-crossroads>; Thomas Shugart, Timothy R. Heath, and Kristen Gunness, *Dangerous Straits: Wargaming a Future Conflict over Taiwan* (CNAS analytical series), <https://www.cnas.org/publications>; Madelyn R. Creedon et al., *America's Strategic Posture: The Final Report of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 (Alexandria, V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23), <https://www.ida.org/research-and-publications/publications/all/a/am/america-s-strategic-posture>.
- ³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카타르의 알 우테이드(Al Udeid) 공군기지이다. 이곳은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전진사령부와 공군작전통제센터가 위치한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로, 미국의 공중작전이 사실상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홍해 및 아라비아해 작전을 지휘한다. UAE의 알 다프라(Al Dhafra) 공군기지는 정찰·감시·정보수집(ISR)과 공군작전의 핵심 거점이며, 쿠웨이트는 미 육군의 병참 및 전력 전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Reuters, "What are the main US military bases in the Middle East?", 28 February 2026.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us-military-facilities-middle-east-2026-02-28/?utm_source=chatgpt.com
- ⁴ Khali Al-Jaber, "Iran's Regional Gambl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Gulf Security," AFkar,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Doha, Qatar, March 2, 2026. https://mecouncil.org/blog_posts/irans-regional-gamble-and-its-implications-for-the-future-of-gulf-security/?utm_source=chatgpt.com.
- ⁵ Ronny Reyes, "UAE launched secret counter-strike against Iran that crippled oil refinery before ceasefire," The New York Post, March 11, 2016. https://nypost.com/2026/05/11/world-news/uae-launched-secret-retaliatory-attacks-on-irans-oil-refinery-report/?utm_source=chatgpt.com.

-
- ⁶ ~Summer Said and Anat Peled, "The UAE's Secret Role in the War Involved Dozens of Strikes on Iran," The Wall Street Journal, May 29, 2026.
https://www.wsj.com/world/middle-east/the-u-a-e-s-secret-role-in-the-war-involved-dozens-of-strikes-on-iran-7fd28c40?utm_source=chatgpt.com.
- ⁷ Sung-han Kim and Beom June Kim, "ROK-US-Japan 'Operational' Cooperation for Responding to a Two-Front Crisi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7, No.4, December 2025, pp.479-500.